환급·배상 '나 몰라라'… 상조서비스 피해 급증

호남·제주 올 접수 작년비 3.5배나 늘어

24%만 배상…업체 구조조정 등 서둘러야

#2011년 8월 모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A씨는 총 98만원을 납입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총 납입대금 중 50%만을 반환해주고 나머지 돈은 반환해 줄 수 없다며 버텼다. '배 째라' 식으로 나오니 도리가 없었다.

#2011년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20만원을 완납한 B씨는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사업자가 차량 배차 명목으로 추가 비용 30만원을 요구해왔다. 배차는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고 계약 당시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막무가내였다.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상조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0월 말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2012년 동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년 동기간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벌써 42건이나 접수됐다.

■ 호남·제주 지역 상조업 소비자피해구제 (단위:건)

지역	2010	2011	2012	2013.10	계	동기(1월~10월) 대비	
						2012	2013
광주	8	10 (25.0%↑)	17 (70.0%↑)	18	53	13	18 (38.5%↑)
전남	5	12 (140.0%↑)	7 (41.7%↓)	11	35	5	11 (120.0%↑)
전북	6	14 (133.3%↑)	49 (250.0%↑)	29	98	4	29 (352.0%↑)
제주	0	2	15 (650.0%↑)	42	59	0	42 (-)
합계	19	38 (100%↑)	88 (131.6%↑)	100	245	22	100 (354.5%↑)

〈자료: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하지만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중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약 환급금의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연령대는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명, 60대 9명, 70대 5명 순으로 상조서비스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했다.

이와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압박과 경영 악화를 놓여 있는 상조업체들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들의 과당 경쟁과 방만 경영으로 인해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재벌닷컴과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산 100억원이 넘는 24개 대형 상조업체 중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곳은 1개사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대처하기가 마땅치 않다"며 "전반적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맞춤형 오피스텔 '중흥S-클래스'

나주 혁신도시에 2483세대 분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70% 이상이 '나홀로 이주'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중흥건설이 대규모의 맞춤형 프리미엄 오피스텔을 분양중에 있다.

8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공급중인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은 지하 2층~지상 12층, 전용면적 28~71㎡로 구성되며 1차 1227실, 2차 1256실 등 총 2483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 오피스텔은 혁신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아 중심상권과 근접한 것이 특징. 중앙호수공원이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호수공원 접근성에 따른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일산의 3개 아파트를 비교한 결과 호수공원 접근성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최대 3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현재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이전이 완료됐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2015년까지 이전 예정이어서 임대 및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 오피스텔은 공급과잉 양상이지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풍부한 임대수요가 기대되는 데다 8·28대책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의 가구당 분양가는 7000~8000만원대로 중도금대출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3000~4000만원이면 투자 및 실거주가 가능하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융자가 가능하다. 입주는 2015년 10월 예정이다. 문의(1661-9649).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WTO 무역원활화 협정 타결

통관절차 간소화·세관 협력 등…한국 무역증진 기대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무역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상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의 조항을 제안해 협정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측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8.74% 상승하고 후생·수출도 각각 8.45%, 11.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은 WTO가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1년 출범시킨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12년 만에 나온 성과다. /연합뉴스

광주 찾은 LX 대한지적공사 사장 지난 6일 광주를 찾은 김영표(왼쪽) LX대한지적공사 사장이 서구 치평동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각 지역 지사장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

해양수산과학원 800건 중금속 조사 오염 1건도 없어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이 도내 주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원은 도내 수산물 800건의 중금속, 금지약품, 미생물 등 57개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량 720건을 배정받아 11월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양식 및 거래 전 단계 800여건의 수산물을 검사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도내 다소비 품목인 조기, 넙치, 고등어, 굴 등 7품종 10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김동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센터장은 "전남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므로 안심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7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8	20	30	33	34	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699,267,875	8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50,348,678	45
3	5개 숫자 일치	1,522,642	1,488
4	4개 숫자 일치	50,000	75,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1,257,969

중견기업 70.6% "근로시간 단축 반대"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12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견기업의 70.6%가 근로시간 단축 개정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36.8%), '납기일 지연과 생산량 감소 등 생산 차질'(29.3%),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적 운영수단 상실'(16.7%), '임금 문제로 노사 간 갈등 유발'(16.1%) 등이었다. 중견기업의 77.0%는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은 이 비중이 87.4%에 달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평균 14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국내 U턴 기업 지방소득세 5년간 면제

고용·설비 보조금도 확대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이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고용·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금융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7일)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8일 내놨다.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첫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과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가진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입지·설비 투자보조금도 국내 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를 유지하면서 신·증설할 때만 주던 것을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신설할 때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총 융자한도를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